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1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28일 (음력 4월 24일) 화요일

국가하천 승격 앞둔 광주천 생태·문화공간 조성

광주시 2021년까지 총 370억원 들여 환경정비

수량·수질개선·생태복원·휴식공간 등 조성

국가하천 승격되면 홍수예방 등 안정적 관리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천을 상시적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하천 승격을 앞둔 광주천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보존과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의 젖줄인 광주천을 상시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37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인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수량부족과 수질악화 등 문제점을 개선한다.

환경 정비사업은 수량 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및 친수시설로 나눠 진행하며, 광주천에 유입되는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오수 간선관로 설치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하루 평균 1만6000t의 맑은 물을 광주천에 공급하기 위해 제4수원지에서 남광주역까지 4.4km 구간에 관로를 설치한다. 광주천 상·중류부에는 대구경 관정 4곳을 뚫어 하루 250t을 확보한다.

정체수역 해소와 하상 오염물질 제거를 통한 수질 개선을 위해 덕흥2보와 유촌보 등 고정보를 일정한 수량이 되면 자동으로 보가 넘어지는 가동보로 변경한다.

교동교~영산강 합류부간 49곳에는 낙차공을 준설해 하천 오염물질도 제거할 계획이다.

생태복원과 친수시설을 위해 생태 보존존, 생태 체험존, 생태 문화존, 생태 휴양존 등 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살린 4개의 테마존을 조성한다.

수질이 양호한 상류에 수달과 어류 서식처를 제공하고 저수호안에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한다.

상류에는 물놀이장과 생태체험관을 조성하고 인공구조물인 켄틸레버 하부공간을 클라이밍, 미니정원, 그래피티 등 시민 쉼터로 꾸민다.

하류 고수부지에는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고수호안에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꽃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6월까지 광주천 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생태·친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광주천 주변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남광주시장 등 관광자원과 광주천을 연계해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도 완성할 방침이다.

광주천은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우선순위에 포함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홍수예방 등 치수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국비 투입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을 통해 맑은 물이 흐르고 옛 정취가 흐르는 공간, 사람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공간,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한빛 1호기 주민 납득할 만한 조치있을 때까지 가동중지"

이개호 의원 "원인규명 위해 제3의 기관 정밀조사 의뢰 추진"

'원자로 열 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 되면서 불안감을 확산시킨 한빛원전 1호기가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멈춰 선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열린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영광 주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장세일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외 등 제3의 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될 한수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한 한수원의 사후 대응이 주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더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제어봉 조작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체르노빌사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소신을 통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고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한빛 1호기는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지적과 안전조치 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긍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영광군민과 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었다.

한수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2분께 원자로를 수동정지 했지만 이상 상황이 발생한 후 약 12시간이 지나서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조치 미흡 논란이 일었다.

한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원자로조종비 면허소지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7년 도입된 특별사법경찰관을 처음으로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하며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앞줄 왼쪽 두 번째)의원.

영광=서희권 기자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

Photo 漫評

버티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6일 조진래 전 의원의 빈소를 방문한 뒤 "수사, 소환, 재수사, 재소환…. 어느 누가 버티겠나? 결국 죽어서 끝이 났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죽음의 배경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전날 수사 압박 등 정치보복이 조 전 의원 죽음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딸의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언급했다. 그는 '어디 목숨을 끊은 조진래 형뿐인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성태 형님…"이라며 "그도 결국 죽어야만 끝나는 것인지 털고 털고 또 털고…. 또 다른 부음이 들려오지는 않을까 전화벨 소리가 겁이 난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장제원

박지원

김성태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